

# 한·미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 비교 연구\*

취재원 사용의 차이와 그 요인을 중심으로

차재영·이영남\*\*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

이 연구는 한국 언론과 미국 AP통신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보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취재원 사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매체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비교를 위해, AP통신의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실체를 다룬 기사들만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 언론은 대부분 매우 적은 수의 취재원을 활용했고, 그것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한 데 반해, AP통신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훨씬 많고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한국 언론은 AP통신에 앞서 일찍부터 노근리사건을 보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노근리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매체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기자들이 AP 기자들에 비해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언론사가 AP통신과 달리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필요한 취재시스템과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입장이 다른 관계자들을 골고루 취재원으로 활용하는 관행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조직 외부적 차원에서는 한국 언론이 민주화에 힘입어 노근리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 과정에서 여전히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자아 검열기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한·미 언론비교, 노근리사건 보도, 취재원 사용, 매체사회학

---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jycha@cnu.ac.kr·ynrhee@freechal.com

## 1. 서론

1999년 9월 30일(미국 시간으로는 9월 29일), 미국의 AP 통신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말 한국 농촌의 한 철교 아래에서 미군이 사흘 동안 양민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기사를 타진했다. 뉴욕타임스, CNN과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었으며, 여태껏 노근리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조선, 동아 등 국내의 주요 언론사들 역시 이것을 머리기사로 게재했다.<sup>1)</sup> 또한 한·미 양국 정부도 노근리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AP 보도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AP 통신의 취재기자들은 이 기사로 풀리처상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보도부문상을 휩쓸다시피 하였다.

왜 한국 언론은 50여 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세계적인 특종을 놓치게 되었는가? 왜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의 실체를 보다 일찍 밝혀 내지 못했는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AP 통신의 보도가 노근리사건에 관한 최초의 보도는 아니었다. AP 통신의 보도가 나오기 5년 전부터 이미 한국의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은 이 사건을 간헐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미흡했고,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양국의 언론 보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인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1)은 저널리즘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국 언론은 보도를 통해 시민과 사회에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진실’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같은 진실 보도를 위해서는 ‘검증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

1) 소위 메이저 일간지라고 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그 자매지들은 AP통신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몇 차례 다룬 것 외에는 사건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다. AP보도 이후 조·중·동 세 일간지가 노근리사건에 대해 대서특필한 것을 두고 ‘사대주 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연호(1999a, 1999b)를 참조할 것.

주장했다. 여기서 ‘검증의 원칙’은 “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증인을 찾아내고, 취재원에 관해 가능한 많은 것을 드러내며,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논평을 구하는 관례”를 의미한다(Kovach & Rosenstiel, 2001, 71). 이처럼 취재원의 적절한 사용은 진실 보도를 위한 ‘검증의 원칙’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AP 통신과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에서 취재원 사용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AP통신과 한국 언론의 보도는 각각 얼마나 많은 취재원을 활용했는가? 활용된 취재원의 성격은 얼마나 다양했는가? 취재원의 신원과 접촉과정은 기사에서 얼마나 공개되었는가? 다음으로 이 같은 취재원 사용상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을 취재과정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양국 언론의 기자들은 취재에 임하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는가? 양국 언론의 취재시스템과 관행은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도록 했는가? 양국 언론이 처해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 사건의 보도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연구의 결과로 한국 언론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한 결함의 개선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AP통신의 보도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한국 언론의 보도를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 가지 미리 언급해둘 것은, 본 연구가 한국 언론은 신문, 잡지, 통신,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보도 사례들을 다루면서, 미국 언론은 AP 통신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비교의 균형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이한 매체들은 분명히 상이한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와 같은 기술적 특성은 각 매체의 보도 내용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통신은 다른 매체들과는 달리 지면과 시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나 이슈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생산해내는 기사가 다른 매체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풍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과 아울러,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보도가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고자 한다.

## 2. 기존문헌 검토

### 1) 한·미 언론비교 연구

최근 언론비교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문적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언론비교 연구자로 손꼽히는 할린과 만치니는 근래 발간한 저서에서 국가간 비교연구가 정교한 개념 구성과 이론의 설명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들은 비교연구를 할 경우, 한 사회에서 “매우 친숙한 매체 체계를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체 체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위해 보다 분명한 개념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Hallin & Mancini, 2004, p.2).

블럼러 등(Blumler & Gurevitch, 1975; Blumler et al., 1992 참고)의 선구적인 연구자들은 1970년대부터 이미 자국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가 지닌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론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자국중심주의의 경향은 매우 뿌리 깊어 심지어 언론비교 연구의 시원으로 간주되는 『언론의 4이론』(1956)조차 영·미 중심의 자유주의적 언론 체계를 절대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다른 체계를 폄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Nerone ed., 1995).

할린과 만치니는 일찍부터 탈(脫)자국중심주의적인 연구 관심을 공유했는데, 그들은 한 연구(Hallin & Mancini, 1984)에서 미국과 이태리의 TV 뉴스 보도 양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가 양국의 정치구조와 문화 및 매체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 언론이 스스로 객관적 보도 양식을 주창해 온 것과는 달리 고도로 해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바람직한 언론비교 연구는 상이한 언론 현상이나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각 사회의 언론이 처해 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언론비교 연구의 전통에 기초하여 한·미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미 언론비교는 주로 양국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 장호순·이재경 교수 등이 수행한 한국 언론재단의 연구(2001)는 양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각종 기사의 취재원 사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한국 신문이 미국 신문에 비해 대단히 적은 수의 취재원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밝혀내고,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논의한 내용을 전제한 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유세경·김미라(2002)는 9·11 테러사건에 대한 미국, 한국, 중국의 주요 일간지의 보도가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프레임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9·11테러와 뒤를 이은 미국의 아프간 침공이라는 국제 분쟁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유사한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일간지는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각 일간지 보도의 이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은 각 국가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심재철 등(2003)도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양국의 주요 신문들이 보도한 대학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양국 신문들의 뉴스가치에서의 차이를 밝혀내고, 그러한 차이의 원인을 양국 신문의 취재·편집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양국 언론, 특히 신문의 보도 내용 비교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예외적으로 박천일(1995)의 연구는 양국 방송(KBS, SBS와 CNN)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메커니즘의 특성을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 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CNN은 언론인 개인의 자율성과 분야별 전문성에 기초하여 국제뉴스 선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국 방송

사들은 관료적이고 위계질서 중심으로 뉴스 선정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통제 메커니즘도 CNN은 시장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는 데 반해, 한국은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라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양국 언론의 보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비교의 대상을 보다 분명히 하고, 취재원 사용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을 기사를 작성한 기사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 2) 보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매체 사회학 연구

일반적으로 보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언론인 개인, 미디어 조직 내부, 미디어 조직 외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언론인 개인의 차원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게이트키퍼 연구의 초기 단계에 뉴스의 선택과 제사가 개별 언론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White, 1950).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언론인의 뉴스제작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언론인 개인이 지닌 성격, 배경, 경험, 정치적 태도, 가치, 신념 등의 특성에 관심을 갖거나(Gans, 1979; Shoemaker, 1984), 언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니는 의식 즉, 전문적 가치나 규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Breed, 1955; Sigal, 1973). 한편, 슈메이커와 리즈는 언론인 개인의 인간적 특성과 전문가 의식의 두 가지 변수 중 후자가 전자보다 미디어의 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개인적 태도, 가치, 신념을 억제하는 것이 전문직업적 언론인의 임무라고 주장했다(Shoemaker & Reese, 1996).

다음으로 미디어 조직 내부 요인에 대한 연구는 뉴스 보도 과정이 결코 몇몇 언론인 개인의 의사 결정이 아니라 미디어 조직의 내부 동학에 의해 진행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의 연구는 예컨대 출입처 제도와 같은 공식적 정보원에 대한 의존이라든지 특정 기사 구성방식의 활

용 따위의 작업 관행을 분석하거나(Tuchman, 1978; Hallin, 1992; 이재경 외, 2000; 박동숙, 2001), 미디어 조직의 구조나 보도 정책,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그리고 조직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Epstein, 1973; Johnstone, 1976; Soloski, 1996). 특히 취재관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자들은 언론이 정부나 다른 합법적인 기구 등의 공식적인 정보원이나 취재경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집단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는 널리 부각되는 데 반해 비권력 집단이나 개인은 무시되거나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Goldenberg, 1975; Tuchman, 1978).

마지막으로 미디어 조직 외부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의 내적 작동 메커니즘보다는 뉴스 보도 과정에 가해지는 외부적 통제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원의 연구는 정치단체나 이익단체 등 다양한 정보원의 대 언론 활동, 광고주의 영향력 행사, 미디어간의 시장 경쟁, 정부의 규제나 간섭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다(Boorstin, 1971; Bagdikian, 1983; Gitlin, 1985; Merrill, 1988; 유재천·이민웅, 1994).

이밖에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문화는 위의 세 가지 차원에 삼투되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Shoemaker & Reese, 1996). 이를테면 언론인의 개인적 태도나 전문가적 자세, 미디어 조직의 위계나 문화, 정보원의 대언론 활동 양식 등은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문화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도 과정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모든 행위자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문화라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활동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나 문화를 세 가지 차원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조직 외부 차원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연구자들(예컨대 박천일, 1995)도 있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선례를 따르기로 한다. 기틀린(Gitlin, 1980)은 한 고전적 연구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학생운동 단체를 주변화, 사소화, 극단화하는 보도 프레임을 통해 일탈적인 것으로 표상화함으로써 그것을 위축시킨 과정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요인들이 AP와 한국 언론의 보도 과정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여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여기서는 1999년 9월 30일자 AP보도와 가능한 균형 잡힌 비교를 위해, 그 시점까지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 가운데 노근리사건의 실체를 중심으로 다룬 8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P 보도가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이 연구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보도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8건의 보도는 《연합통신》(1994.4.29), 《한겨레신문》(1994.5.4), 《월간 말》(1994.6), 《시사저널》(1994.6.30), 《뉴스메이커》(1994.11.7), 《한겨레21》(1997.9.11), MBC(1997.11.2), 그리고 다시 《월간 말》(1999.6)의 순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그밖에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관련 보도는 대부분 피해자나 가족들의 소설 발간, 청원서 제출, 성명서 발표, 위령제나 향의집회 등 뉴스 이벤트에 관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어서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었다. 특히 KINDS를 통해 검색된 21건에 달하는 중앙 일간지 보도 중 불과 1건만이 사건의 실체 제시를 중심으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대상을 확정된 후, AP통신과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의 비교를 위해 먼저 모든 기사의 개요를 살펴보고, 기사 분석을 통해 취재원의 종류나 활용 빈도 등을 확인했으며, 그밖에 취재원의 신원과 접촉과정의 공개 여부 등도 검토했다.

2) 영어방송인 아리랑 TV도 1997년 6월에 노근리사건의 실체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지만, 그 후 담당기자가 사직을 하고 유학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해 9월초 CNN <월드리포트> 시간에 다시 방영되기도 했다. 정구도(2003) 참조.



<표 1> 분석 유목과 사례

분석 유목	사 례
피해자	학살에서 살아남은 한국인, 그 가족들
가해자	학살에 가담하거나,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한국전 참전 미군들
전문가	법률가, 교수
정부 관리	한미 양국 정부 관리
단체	피해자들과 가족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
자료	발굴된 미국측 비밀해제 문서, 한국측 피해자들의 성명서, 탄원서와 그에 대한 미국측 회신, 한국전쟁사, 미군부대사, 다른 언론매체의 관련 기사

분석 유목으로는 크게 인물, 단체, 자료 취재원으로 나누고, 인물은 다시 피해자, 가해자, 전문가, 정부 관리 등으로 나누었으며, 분석 유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례는 위의 <표 1>과 같다. 여기서 익명 취재원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유족들, 마을 사람들(villagers), 퇴역 미군들(ex-GIs, American veterans) 등으로 표기된 것들을 가리킨다. 단 반복적으로 표기된 것들은 하나의 취재원으로 간주했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AP와 한국 언론의 취재원 사용상의 차이를 야기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실시 시기와 대상자의 소속 및 취재 경력 등에 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인터뷰 실시 일자 및 대상자의 소속과 취재 경력

번호	날짜	소속	이름(익명)	성별	기자경력
1	2001. 2. 4	한겨레신문	H	남	10년
2	2001. 2. 4	경향신문	K	남	10년
3	2001. 2. 5	연합통신	Y	남	11년
4	2001. 2. 5	시사저널	O	남	11년
5	2001. 2. 14	월간 말	O	남	13년
6	2001. 2. 14	MBC	J	남	10년
7	2001. 3. 12	한겨레 21	J	남	11년
8	2001. 1. 20/ 2002. 5. 16	AP통신	C	남	11년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뷰 대상자들은 AP통신의 서울주재기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이었고, 대부분 취재 경력 10년 남짓 된 남성 기자들이었다. 《월간말》지의 두 차례 보도는 동일한 기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향신문》 기자의 기사는 《뉴스메이커》에 게재되었다. 인터뷰는 2001년 1월초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한겨레21》의 J기자는 스케줄을 잡기가 어려워 같은 해 3월초에 이메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또한 AP의 서울지국 C기자는 2002년 5월 중순에 한 차례 다시 인터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인터뷰에서는 주로 초기 인지 단계에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혹은 그것의 뉴스가치를 어떻게 보았는지 하는 것과, 취재 과정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어떤 취재원들을 어떻게 접촉했는지, 취재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회사 안팎에서 어떤 영향력 행사나 압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인터뷰 외에 기자들이 출판한 책이나 기고 등에서 노근리사건 취재보도과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조 자료로 참고했다.

부가적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 구성된 노근리사건대책위원회(이하에서는 노근리대책위)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재기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 4. 한국 언론과 AP의 노근리사건 보도 비교

##### 1)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 개요와 취재원 사용

한국 언론이 노근리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보도 사례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노근리사건에 대한 최초의 국내 보도라 할 수 있는 1994년 4월 29일자 연합통신 기사는 200자 원고지 10매 분량으로 “전직경찰관, 6·25때

미군이 저지른 양민학살사건 폭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가족인 정은용씨의 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에 의존하여,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와 미국정부의 적절한 대책 요구를 담은 정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는 데 그쳤다. 이 기사의 취재원은 정씨와 정씨의 소설, 단 2개뿐이었다.

국내 일간지 가운데 최초로 노근리사건을 다루었던 1994년 5월 4일자 《한겨레신문》의 지역면 기사는 200자 원고지 6매 분량의 비교적 짧은 기사였다. 이 기사는 “미군 노근리 피난민 양민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피해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사건의 개요를 제시하고, 그간 피해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노력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한국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다. 사용된 취재원은 정은용씨와 다른 피해자 1명, 미군소청사무소 회신문과 한국전사 등 자료 2건을 합쳐 도합 4개였다.

1994년 6월 중순에 발간된 《월간말》의 7월호는 이 사건을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최초 증언·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백여 명 학살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의 심층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국내언론 가운데 최초의 현장 취재와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가 간행한 『한국전쟁사』의 관련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미군의 양민학살 이유를 추론했다. 그리고 이 기사는 학살 현장 사진 4매와 한 피해자 부부 사진을 게재하고, 88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 명단을 첨부했다. 활용된 취재원은 정은용씨, 정씨 부인, 다른 피해자 3명 등 피해자 5명과 『한국전쟁사』 자료 1건 등 총 6개였다.

1994년 6월 30일자 주간 《시사저널》 244호는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으로 “미군, 4일간 피난민 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앞의 『한국전쟁사』 가운데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을 지적하고, 현장 취재와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사건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림과 현장사진 3장을 제시하였다. 이 기사는

『한국전쟁사』 외에도 미군 소청사무소 회신문과 정씨의 소설을 포함한 3건의 자료와 정씨 외에 4명의 피해자들까지 총 8개의 취재원을 활용했다.

주간 《뉴스메이커》의 1994년 11월 17일자는 “50년 ‘영동 양민학살’ 관련자료 첫 발견 — 황간 철교 밑에 4백여 구 시체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으로 실었다. 여기서 《뉴스메이커》는 노근리대책위가 발굴해서 제공한 1950년 8월 19일자 《조선인민보》 2면 기사 내용을 발췌해 전재하고, 이 기사의 내용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대책위원장 정은용 씨의 주장과 《선인민보》가 북한의 신문으로 편향성을 담고 있지만 관련 문서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역사학자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이 기사가 실린 《조선인민보》 지면 사진과 피해자 및 학살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함께 실었다. 이 기사는 정은용씨, 노근리대책위, 《조선인민보》 기사, 그리고 역사학자까지 모두 4개의 취재원을 사용했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달리, 이 기사의 중심 취재원인 자료의 출처가 노근리대책위였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주간 《한겨레21》의 1997년 9월 11일자 174호는 “미군 양민학살, 국가 배상하라”는 제목으로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의 기사에서 노근리대책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하면서, 3장의 현장 사진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또한 이 기사는 미국 제1기갑사단의 사단사와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 앞의 《조선인민보》 기사 등의 문서자료에 근거하여 이 학살사건이 교전 중이 아니라 인민군이 사건현장에 진격하기 전에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했다. 이 기사는 손해소송 신청서, 미군 배상사무소의 회신을 포함한 5건의 자료와, 정은용씨와 3명의 피해자, 노근리대책위, 그리고 청주지검이라는 정부기관 등 모두 11개의 취재원을 사용했다.

1997년 11월 2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47년만의 증언”이라는 15분 분량의 에피소드 역시 피해자 중심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근리 사건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살 현장 방문, 피해자들과의 인터뷰, 『미

1기갑사단사, 『한국전쟁사』, 피해자들의 진정서와 탄원서, 미육군성 답변서, 그리고 CNN <월드리포트>에 방영된 아리랑 TV의 보도 내용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사건의 전개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미군이 상부 명령에 따라 피난민들을 학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 10명, 자료 6건, 전문가 2명 등 총 18개의 취재원을 사용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 가운데 가장 많은 취재원을 활용한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월간 말》지의 1999년 6월호는 “50년 7월 영동주민 400명 학살 관련 미 제1기병사단 병사들 마침내 입 열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지 30매 분량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사건 당시 미1기갑사단의 작전일지와 부대 배치도, 그리고 《조선인민보》 기사,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의 『한국전쟁』, 『미1기갑사단사』, 『한국전쟁사』 등 각종 문서자료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그밖에 정은용 씨와 익명의 피해자 유족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노근리사건을 재구성했다. 이처럼 이 기사는 피해자 2건, 자료 5건 등 도합 7개의 취재원을 사용했다.<sup>3)</sup>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언론 보도의 취재원 사용상의 특징으로는 첫째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용 취재원의 숫자가 대체로 조금씩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것도 학살사건의 가해

3) 하지만 이 기사는 제목에서 언급한 것과는 달리 가해자였던 1기갑사단 병사들의 증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단지 그들이 “최근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그들의 증언을 발굴해 자세히 실을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이후 《월간 말》지가 미군의 증언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적은 없다. 오연호 기사는 AP 보도가 나온 직후 『관훈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이 기사의 작성 동기를 밝히면서, AP의 한 관계자가 그에게 AP 보도가 그 해 “6·25 이전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아 “압력용으로 AP 관계자에게 들은 인터뷰 내용의 대강을 적었다”고 말했다(오연호: 1999a, 246쪽).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해자들을 직접 취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정보원도 밝히지 않은 채 썼다는 점이다.

자 측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 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은 취재과정에서 철저히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했고, 거의 모든 기사가 피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물론 한국 언론의 보도가 관행에서 벗어나 권력기관이 아닌 힘없는 피해자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도 분명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성격상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 확인과 대비를 통해 진실을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하겠다.

둘째로 MBC 프로그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서 활용된 피해자 취재원의 숫자도 5명을 넘지 않았다. 게다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들도 대부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노근리대책위에서 연결해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또한 위의 기사들 가운데 역사학자나 법률가 등 전문가를 취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도 드물었고, 심지어 한국 정부 당국을 취재원으로 삼은 경우도 단 1건 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기자들의 능동적인 취재 활동이 극히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역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언론은 노근리사건을 보도 하면서 약간의 문서자료들을 취재원으로 활용하기는 했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노근리대책위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도 거의 대부분 대책위가 수집해 제공한 것들이고 기자나 언론사가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이후 한국 언론 보도에서 많이 인용된 『한국전쟁사』, 『한국전쟁』, 『미1기갑사단사』 및 <조선인민보> 기사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대책위가 발굴해 제공한 것들이라고 한다.

<표 3> 한·미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의 취재원 종류와 수(괄호 안은 익명 취재원)

언론사	취재원				단체	자료	계
	피해자	가해자	전문가	정부관리			
연합통신(1994.4.29)	1	0	0	0	0	1	2
한겨레신문(1994.5.4)	2	0	0	0	0	2	4
월간말(1994.6)	5	0	0	0	0	1	6
시사저널(1994.6.30)	5	0	0	0	0	3	8
뉴스메이커(1994.11.17)	1	0	1	0	1	1	4
한겨레21(1997.9.11)	4	0	0	1	1	5	11
MBC(1997.11.2)	10	0	2	0	0	6	18
월간말(1999.6)	2(1)	0	0	0	0	5	7(1)
평균	3.75(0.13)	0	0.38	0.13	0.25	3(0.13)	7.5(0.13)
AP통신	5(1)	21(8)	2(1)	4	0	13	45(10)

또 다른 사례로 1999년 《월간 말》지 6월호는 미군 1기갑사단 5기갑연대 2대대장과 연대장이 피난민 통제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보고와 명령을 담은 작전일지를 공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다가선 듯한 보도를 하였는데, 이 자료 역시 MBC의 워싱턴특파원이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기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뒤늦게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해 개인적으로 대책위에 넘겨준 비밀해제 문서였다는 것이다(정구도, 2003, 61~62쪽).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언론은 노근리사건을 보도하면서 ‘취재원의 다양성(diversity of sources)’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모든 것을 의존함으로써,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관행적으로 어느 한쪽의 소수 취재원(비록 취재원의 성격은 다르지만)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언론의 고질적 결함이 여기서도 다시 드러났다고 하겠다(한국언론재단, 2001).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에서 드러난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뉴스메이커>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대책위가 문서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스스로 그러한 자료들을 발굴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단순히 한국 언론의 오랜 관행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도의 투명성’(transparency of

reporting)을 요구하는 현대 언론의 취재보도 윤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Kovach & Rosenstiel, 2001; 김옥조, 2004).

## 2)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 개요와 취재원 사용

AP통신은 1999년 9월 30일 “전쟁의 숨겨진 이야기: 퇴역 미군들 한국 피난민 살해 시인(War’s Hidden Chapter: Ex-GIs Tell of Killing Korean Refugees)”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단어 3,200개 분량(200자 원고지 약 40매)의 노근리사건 기사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AP통신의 기사는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발생한 양민학살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자료 등을 통해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이것은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기사는 그동안 피해자들의 주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왔으나 이제 가해자인 퇴역 미군 병사들의 증언과 미군 지휘관들의 명령을 담은 비밀 해제 문서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밝히고,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에 기초하여 사건 발생 전후의 미군 부대 배치와 피난민 이동 상황, 학살 현장 등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AP통신 기사에는 가해자 측 취재원이 무려 21건이나 활용되었고, 그 중에 8건은 익명으로 제시되었다. 피해자 측 취재원은 5건이었는데, 익명으로 제시된 취재원은 1건이었다. 또한 이 기사는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 3건과 한국 정부 관계자 1건, 전쟁관련 법률 전문가 2건(1건은 익명) 등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AP통신 기사는 총 13건의 자료들을 활용했는데, 노근리사건대책위가 발표하거나 당국에 제출한 성명서나 청원서, 한국전쟁 당시의 《조선인민보》 기사, 한국전쟁 기록 등 도합 5건의 한국 측 자료 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관련 미군 문서들을 여러 건 발굴하여 제시했다. 이러한 문서로는 미 1기갑사단 작전참모가 7월 24일에 “단 한 명의 피난민도 전선을 통과시키지 말 것. 전선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발포할 것. 여성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재량껏 처리할 것”이라고 하급부대에 지시한 내용을 담은 8기갑연대의 작전일지, 상급부대인 미 8군 본부가 예하 모든 전투부대에 “피난민을 한 명도 전선을 넘어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7월 26일의 명령서, 제1기갑사단의 오른쪽에 주둔했던 미 25보병사단장이 (전투지역에서 남한 주민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주민들은 적으로 간주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한 7월 26일의 통신일지와 7월 27일에 전투지역의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발포하라”고 한 명령서 등 4건이 있다. 그밖에도 미 공군 전투기가 피난민들에게 사격을 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2건, 미1기갑사단사, 미군 소청사무소의 회신문 등의 미국측 자료가 활용되었다.

따라서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AP통신의 기사는 가해자 21, 피해자 5, 정부 관리 4, 전문가 2, 자료 13 등 총 45건의 취재원을 활용했으며, 이 가운데 익명 취재원은 가해자 8, 피해자 1, 전문가 1 등 총 10건이었다.

이처럼 철저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문서자료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AP통신 기사는 매우 높은 내적 완결성을 지닌 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의 취재원 사용과 관련된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표 3>에서 드러나듯이, 첫째로 그것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다수 취재원의 증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취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같은 상황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퇴역 군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피난민 무리에서 총이 발사되는 것을 보았다거나 사건 후 위장한 북한군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증언한 반면에, 다른 미군과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한 것을 나란히 인용했다. 무려 50년 전에 발생했던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한결 같았다면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나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역시 <표 3>에서 확인되듯이, AP는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이외에 다수의 중요한 문서자료를 직접 발굴해서 제시했다. 특히 비밀분류가 해

제된 미군 관련 문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AP는 문서자료의 내용을 사건 관계자의 증언과 대조하면서 보다 철저한 진실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보도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AP의 보도에는 익명의 취재원이 약 22%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노근리사건의 실체를 다룬 한국 언론의 보도에 비해서는 월등 높은 것이 사실이다.<sup>4)</sup>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하자면, AP의 경우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취재원들, 특히 가해자 측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언론은 대부분 피해자 측 취재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신원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실명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뉴스메이커》가 자료의 출처를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 언론은 전혀 취재과정을 밝히지 않았는데 반해, AP는 기사의 말미에 취재과정을 개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사의 진실성을 제고하고 있다. AP 취재팀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대의 학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백 상자에 달하는 비밀 해제 문서들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뒤졌고, 130여 명의 퇴역 군인들과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취재과정의 공개를 통해 AP는 ‘보도의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4) 한국언론재단(2001)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뉴욕타임스》의 익명 취재원 사용 비율은 무려 36.3%에 이르렀고, 한국의 4개 중앙지의 경우는 평균 27.8% 정도로 오히려 한국의 중앙지가 《뉴욕타임스》에 비해 낮았다.

5) 하지만 AP도 역시 노근리사건대책위로부터 《조선인민보》 기사 등 일부 자료 제공을 포함해 도움을 받은 사실을 기사에서 밝히지 않았다. 노근리사건대책위 대변인은 AP의 취재 초기에 2권의 자료 파일을 담당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AP 취재기자는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기사에서 밝힐 경우 피해자에 대한

AP 보도는 이처럼 철저한 취재를 통해 기사의 내적 완결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세계 언론계에서 AP통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기사의 완결성이 부족했다면 결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예컨대 1994년 7월 6일에 이미 세계 4대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AFP가 노근리사건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 때는 이와 같은 반향이 없었다. 그 이유는 AFP 보도가 피해자들의 청원서 제출 사실과 피해자들의 증언으로만 구성된 스트레이트 기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한국 언론과 AP 통신의 노근리사건에 대한 보도는 무엇보다도 ‘취재원의 다양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 통신 등 상이한 특성을 지닌 매체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게 소수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증언에 주로 의존했던 반면에, AP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측인 퇴역 미군의 증언까지 확보했다.<sup>6)</sup> 물론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는 취재원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취재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 언론이 일부 활용한 자료도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것뿐이었는데 반해, AP는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비

---

지나친 의존으로 보여 기사의 신뢰성을 의심 받고, 미국 내 군부 및 보수 세력의 반발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 6) 대체로 주간지나 월간지는 일간지에 비해 지면의 제약이나 마감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의 경우 그러한 매체 특성의 차이가 취재원 사용에 그리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방송도 시간의 제약을 상당히 받는 편이긴 하지만,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시사 다큐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인 방송 뉴스에 비해 그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한 앞서 발굴된 취재원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 가운데 가장 충실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밀 해제된 미군 문서들을 발굴해 제시했다. 이 같은 취재원 활용 면에서의 차이는 기사의 완결성 차이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언론과 AP의 노근리사건 보도는 취재과정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보도의 투명성’ 면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 5. 한국 언론과 AP의 취재보도 과정과 영향 요인에 대한 비교

그렇다면 양국 언론 보도의 취재원 사용 면에서의 차이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AP의 보도가 한국 언론의 보도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보충 취재를 통해 더욱 충실한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직접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과의 심층 인터뷰와 이들의 저서나 기고 내용을 검토하여, 보도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개인적 차원, 조직 내부적 차원, 조직 외부적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개인적 차원

먼저 양국 언론은 기자나 데스크 담당자의 전문적인 기사가치 판단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 서울주재기자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의 뉴스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고, 취재에 착수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98년 4월 국내 모 주간지에서 노근리대책위 사람들이 주한 미대사관에 탄원서를 접수시키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고 기사가 될 만하다고 판단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서울지국 데스크에 취재 아이템을 올리고, 데스크의 허락을 받아 본격적으로 취재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미 이 사건이 큰 기사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노근리사건이 미국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AP가 내 기사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AP통신사에서 이 사건의 뉴스가치를 인정한 것은 서울지국의 취재기자 와 데스크만이 아니었다. 다음 절에 제시되듯이, 미국의 본부 간부들도 서울 지국의 보고를 받고 뉴스가치를 인정해 즉각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탐사취재에 들어가도록 했던 것이다(Hanley et al., 2001).

한편, 한국의 거대 언론사들은 대부분 AP 보도가 나올 때까지 노근리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을 회피했지만, 일단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룬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은 대체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렇게 많은 양민이 미군에 의해 의도적으로 몰살당한 상황을 전해 듣고 피해자 수와 미군의 의도성에 놀랐으며,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건의 비중상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한겨레 21》 J기자).

(대책위 대변인) 정구도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이런 사실도 있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고, 또한 한국 방송에서 다룬 적이 없다는 얘기에 《한겨레》 지역면, 《월간 말》 등은 독자층이 국한되어 있으니, 우리 프로에서 다뤄주면 이슈화시킬 수 있겠구나, 보도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MBC J기자).

이처럼 이들은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정씨의) 소설을 읽고 놀랐다”(월간 말 O기자),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경향신문 K기자) 하는 식으로 그 뉴스가치를 대체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이 사건의 뉴스가치를 낮추어 보도록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슬픈 얘기지만, 국민도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가 나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 당시 이런 일들은 불가피했고 민간인 피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한겨레신문 H기자).

그 전에 이미 《한겨레》나 《말》지 등에서 양민학살 기사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도 아니었고, 이 기사가 대중의 호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보도로 그쳤습니다(시사저널 O기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노근리사건이 한국전쟁 중에 무수히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희소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유사한 사건들이 이미 다른 언론사에 의해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뉴스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일부 일간지 기자들은 편집 단계에서 데스크가 노근리사건 관련 기사의 뉴스가치를 다른 기사들에 비해 낮게 평가해 지면배정에서 지방면으로 밀리거나 심지어 본지가 아닌 자매지의 지면에 게재되었다고 진술했다.

지역데스크가 생각하기에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본면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근리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갈이 붙려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희소성이 떨어져 기사로서 영양가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한겨레신문 H기자).

타 이슈와의 경쟁에서 밀렸고, (경향신문의) 지면도 충분치 않았고, 그러한 기사에 대한 분위기도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어야 한다는 동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지는 아니더라도 《뉴스메이커》에 실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경향신문 K기자).

앞에서 보았듯이 AP통신이 기자와 지역데스크, 본부까지 일관되게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높게 평가한 반면에, 한국 언론의 경우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재보도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왜냐하면 뉴스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되는 사건에 대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조직 내부적 차원

무엇보다도 AP보도의 장점은 노근리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를 찾아내어 증언을 확보하고, 또한 사건과 관련된 미국 측 문서자료를 발굴해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한 점이라고 인정된다. 이것은 AP통신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한 팀 취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P통신은 서울지국 주재기자의 보고를 받고 즉각 조사전문가 1명, 본사 기자 1명, 그리고 서울지국 주재기자 1명으로 특별취재팀을 조직, 탐사취재에 착수하게 했으며, 곧 이어 국제문제전문기자 1명이 팀에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1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탐사취재 과정은 취재팀 기자들이 후일 공동 출판한 저서의 마지막 장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AP의 취재팀이 구성되고 나서 이 팀의 편집자가 가장 먼저 지시한 작업은 조사전문가로 하여금 한국의 피해자 측과 미국 정부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던 제1기갑사단의 현장 주둔 여부를 공개된 미군의 한국전쟁사 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일이었다. 곧이어 조사전문가와 본사 기자 1명을 국립 문서보관소에 파견하여 관련 부대의 각종 비밀 해제 문서들을 검색하게 했고, 이를 통해 앞의 기사 분석에서 살펴본 결정적인 증거들을 획득하였다. 그 후 이 기자와 뒤늦게 팀에 합류한 국제문제전문기자가 함께 한국전 당시 1기갑사단 병력 가운데 생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인터뷰를 통해 학살사건을 저지른 단위부대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미국에서 가해자 측 취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주재기자도 피해자 측 증언과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 취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취재팀은 수집한 자료를 기자들과 담당 편집자만 볼 수 있게 마련된 전용 웹사이트에 올렸고, 상호간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계속해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Hanley et al., 2001; 송은주, 2000).

이와 같이 AP통신이 즉각적으로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한·미 양쪽에서 취재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조직 구조상 유연한 취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P는 전문 분야나 주제별 취재부서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팀을 만들어 특정 사건이나 이슈의 취재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조직 내부 차원의 요인으로는, AP가 세계 일류 통신사로서 보유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것처럼 장기간 특별취재팀이 노근리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어떤 한국 언론사도 AP통신처럼 여러 명의 기자로 취재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한 두 명의 기자라도 장기간 투입해서 노근리사건을 취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과 AP통신 기자들이 노근리사건 취재에 투입되었다고 진술한 인력과 취재기간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한국 언론과 AP통신의 노근리사건 취재 인원 및 기간

언론사	취재 인원(명)	취재 기간
연합통신	1	3-4일
한겨레신문	1	2주
월간 말(1994.6)	1	2-3주
시사저널	1	2주
뉴스메이커	1	약 20일
한겨레21	1	3-4일
MBC	2(카메라 기자 포함)	2주
AP통신	4	1년 6개월

AP통신의 경우 4명의 기자가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렸던 것과는 달리, 한국 언론은 카메라 기자를 포함해 2명의 기자를 투입했던 MBC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단 1명의 기자로 길어야 20일 짧으면 3~4일 정도 취재해서 보도하게 했던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한국 기자와 데스크가 이 사건의 뉴스 가치를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뉴스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언론사는 조직 내부에 그와 같은 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취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러한 팀을 장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언론사들은 팀 구성은커녕 단 한 명의 기자라도 장기간 투입해서 이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 기자들이 인터뷰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발언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기사는 취재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단발적으로 취재팀이 꾸려지기는 하지만, 언론 풍토가 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사 막기에 급급하지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뭐야 이거 또 났네 이런 식이니까,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연합통신 Y기자).

당시 외국에 나가 가해자를 찾아본다는 것은 업무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자가 1년 6개월 동안(장기간) 아무 것도 안하고 외국 가서 취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MBC J기자).

일간지 기자로서 한 가지 사건에 매달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문서보관소에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은 했지만, 미군과 관련이 있어서 자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경향신문 K기자).

우리 언론은 인력 부족, 인식 부족, 시간 부족, 또 취재시스템의 특성상 한 사건에 장기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시사저널 O기자)

AP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취재를 가려고 했지만, 회사 재정상의 문제로 업무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MBC에 합동취재를 제안했지만, 거절 당해 이래저래 좌절되었습니다(<월간 말> O기자).

기자들의 이 같은 발언에서 규모가 작은 《한겨레21》이나 《시사저널》 같은 주간지나 《월간 말》 같은 월간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MBC나 연합뉴스와 같은 거대 언론사도 심층 취재를 위한 여건이 AP통신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기자들은 가해자 측 취재원에 대한 발굴과 접촉은 포기하고 피해자 측 취재원의 입장이라도 충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부 기자들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저는 피해자 증언을 알리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언론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상당히 협조적이어서 취재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책위에서 만족할 만한 보도 자료를 제공해줘서 기자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을 풀어주는 역할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MBC J기자).

…그러나 나도 한국기자로써 할 만큼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했으면 좋았겠지만 AP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기자들도 핵심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측의) 대량학살 증언을 다루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입니다(《월간 말》 O기자).

---

7) 참고로 2004년 판 『한국 신문·방송 연감』에 의하면, 중앙 일간지 11개사의 평균 종사자는 기자를 포함하여 약 525명이고, 연합뉴스의 종사자는 기자를 포함, 총 690명이었다. 한편 AP 통신의 종사자나 기자 수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AP통신의 서울지국과 본사의 정보담당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했으나 확실한 통계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몇몇 국내 전문 연구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각종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할 때 연합뉴스는 약 500명의 기자가 일하는데 반해, AP는 약 2,000~2,300명의 기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기자수의 차이는 기자들의 작업 강도나 조건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언론재단이 2003년에 발간한 『한국의 언론인』에 따르면, 한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들의 주당 평균 기사 작성 건수는 15.9건으로 밝혀졌지만, AP통신 기자의 기사 작성 건수에 대한 통계치는 전혀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기자들이 소수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노근리대책위원회에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취재했던 것과는 달리, AP통신은 가해자 측 취재원 발굴에 애썼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 취재원에 대해서조차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서울주재기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알 수 있다.

그간의 한국 언론의 노근리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주민들의 주장만 있을 뿐, 정씨의 책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어, 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해자 주장만 가지고는 더 이상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해자인 미군 쪽의 증거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가족은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대책위 사람들이 아닌 사람 들까지 찾아내 만났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대책위 소속 피해자들의 천편 일률적인 증언보다 생생하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앞의 한국기자들의 발언과 AP통신 기자의 발언에서 우리는 양국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언론은 일찍부터 정부기관이나 정치가와 같은 힘 있는 소수의 취재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취재보도 관행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이원락, 1991; 강명구, 1994). 노근리사건 보도의 경우에는 한국 언론이 비록 힘없는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이슈를 다루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한 쪽 관계자, 그것도 일부 소수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것은 낡은 잘못된 취재보도 관행이 방향만 달리하여 되풀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AP통신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 취재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피해자 측이라 하더라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위원회 외에 다양한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코바치와 로젠스탈이 말한 ‘검증의 원칙’과도 부합되는 적절한 취재보도 관행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조직 외부적 차원

AP통신과 한국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과정에서 외부의 정부기관이나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압력이 행사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취재기자들만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간부급 수준에서 실제 그러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언론계 안팎의 위협적인 분위기가 보도과정에 작용한 경우는 AP통신이나 한국 언론 양측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사실 AP는 취재팀이 구성된 지 4개월 만인 1998년 7월말에 기사 작성을 완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사의 공개는 유보되었고, 최종적으로 AP가 ‘노근리 다리’라는 슬러그를 붙여 기사를 내보낸 것은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더 지난 1999년 9월말이었다. 이처럼 보도가 지연된 까닭은 바로 1998년 6월초에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의 오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NN은 미군이 베트남전 기간에 라오스에서 사린이라는 독가스를 살포해 미군 탈영병 20여명을 살해했다고 보도했다가, 미 국방성과 베트남 참전용사회 등으로부터 반박과 항의를 받고서 기사 자체를 취소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미 언론계에는 미군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를 냉각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가 초래되었다(Hanley et al., 2001).

이후 AP의 취재팀과 간부진 사이에 기사의 공개 여부를 놓고 지리한 논란이 진행되었으며, 그 와중에 취재팀이 해체되고 팀을 이끌었던 편집자가 사임하기도 했다(Hanley and Mendoza, 2000; 문화일보, 2000.5.17). 하지만 취재팀은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취재원 발굴과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기사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8)</sup> 그리고 기사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회사 안팎에 알려지면서 언론사로서 AP의 위상 문제가 제기되

8) 또한 취재팀은 이 기간 동안에 한국전쟁 시기에 있었던 다른 양민학살 사건들-예컨대 피난민에 대한 미군 전투기의 무차별 사격이나 낙동강 다리 폭파 시의 대규모 피난민 살해 등 유사 사건들을 발굴해내었다. Hanley et al., 2001, p. 274 참조

었고, 간부진이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결국 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이 기사가 전 세계에 배포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Hanley et al., 2001).

한편, 한국 언론은 1980년대 말 이후 진행된 민주화로 인해 정부의 강압적 통제에서 벗어났으며, 사실 이 때문에 1990년대 중반부터 노근리사건 보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근리사건 보도과정에서 취재기자나 언론사가 국가 권력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압력을 받은 사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언론이 간직해온 ‘반공’이나 ‘친미 의식’ 등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여전히 노근리사건 보도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기자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뀐 후 피해자들이 정부에 진정하고 그랬지만, 한국과 미국은 끈끈한 우방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한겨레신문 H기자).

군사정부 끝나고 90년대로 갓 넘어온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노근리사건 같은 것을 심층 취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경향신문 K기자).

그 동안 우리 언론은 국가의 이익과 사실이 충돌할 때 사실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관성에 젖은 언론인들에게는 노근리가 달갑지 않은 이슈일 수 있다. 노근리 때문에 한-미 우호관계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노근리를 북한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AP를 마지못해 따라가되,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오연호, 1999a, 248~249쪽).

이처럼 ‘친미’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한국 언론의 자아검열 기제가 노근리사건을 아예 다루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다룬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노근리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언론사들까지도 이 같은 자아검열 기제로 말미암아 보다 능동적으로 미군을 포함한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

해 노력하지 못하고, ‘객관적 보도’라는 장치에 기대어 노근리대책위의 활동에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데 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언론과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에는 취재원의 다양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 언론은 대체로 피해자 측, 특히 노근리대책위가 소개하고 제공한 소수의 사람들의 증언과 약간의 문서자료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반면에 AP는 노근리대책위 이외에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났고, 가해자 측인 퇴역 미군의 증언과 비밀 해제된 미군 관련 문서자료와 같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상의 차이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상이한 차원의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근리사건을 다루었던 일부 한국 언론인들이 AP통신에 비해 노근리사건의 뉴스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던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조직 내부적 차원에서는 AP통신은 노근리사건 보도의 경우처럼, 장기간의 기획취재를 위해 필요한 팀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취재시스템이나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었는데 반해, 한국 언론사는 매체의 종류나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한 취재시스템과 자원을 결핍하고 있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AP는 진실 보도를 위한 ‘검증의 원칙’에 부합되게 다양한 취재원을 확보하는 취재관행을 따르고 있었지만, 한국 언론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 외부적 차원에서는 AP통신이나 한국 언론이 모두 노근리사건의 보도과정에서 정부 기관이나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AP통신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사의 미군 관련 오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사의 공개가 지연되었으나,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 보충 취재를 확대함으로써 기사의

완결성을 높여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반공’이나 ‘친미’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자기검열 기제가 보다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언론의 노근리사건 보도에서 드러난 취재원 사용상의 차이를 초래한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원인을 밝혀 보고자 했으나, 그 결과가 최소한 일부 차원에서는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양국 언론사들의 조직 구조나 인력 및 재원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이에 관한 기자들의 언급이 인용되었을 뿐이다. 이것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AP통신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한국 언론의 노근리보도가 지닌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우선 AP통신의 보도 이전에 한국 언론이 노근리사건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 동안 한국 언론은 출입처제도 등의 취재관행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정치가 등 힘 있는 공식적 취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 경우는 힘없는 비공식적 취재원인 노근리대책위에 의해 제기된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민주적 역할과 관련하여 일단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노근리사건 보도과정에서 한 쪽 취재원인 노근리대책위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도 대책위가 주선해주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관련 문서자료도 거의 대부분 대책위가 발굴하여 제공한 것을 정리해 전달하는 식이었다. 취재경로 면에서 보자면, 한국 언론은 분명히 정부의 고위 관리와 같은 권력을 가진 취재원이 주도하는 ‘관행적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힘없는 비정부단체의 홍보활동이라는 ‘비공식적 경로’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언론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인터뷰나 자료 발굴 등의 ‘기획적 경로(enterprise channel)’는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Sigal, 1973, pp.120~121).

한국 언론의 이 같은 소극적 접근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뉴스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자기검열 기제에 의해 위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보다 중요한 요인은 한국 언론이 취재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취재원에 대한 수동적 의존은 객관적 보도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인적, 물적 비용 절감을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취재원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단일한 보도 방식으로는 노근리 사건과 같이 관계자들 간에 이해와 입장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진실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민웅(2002)이 적절히 지적한 대로, 보도의 현실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 면에서 볼 때 진실 보도가 여전히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 언론은 진실 보도를 위해 취재원의 다양화라는 '검증의 원칙'에 더욱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언론인 개인 차원의 전문가로서의 인식 차원만이 아니라 언론사 조직 차원의 취재시스템과 취재보도 관행 차원에서도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김광원 (2000.5.17). 노근리 추적 '진실의 힘'. 《문화일보》.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동숙 (2001). 취재원과 기자의 역할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술논총 2001』. 227~282.
- 박천일 (1995). 방송의 국제뉴스 선정과정과 통제 메커니즘 비교분석 연구: 한국 KBS, SBS와 미국 CNN의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7호, 70~97.
- 송은주 (2000). 화제의 인물/ '노근리 보도'로 풀리처상 수상한 AP통신 서



- 울지국 최상훈 기자. 《신문과 방송》, 6월호.
- 심재철·정완규·김균수 (2003). 한국과 미국 신문의 뉴스가치 비교. 《한국 언론학보》, 47권 3호, 95~124.
- 오연호 (1999a). 노근리와 AP와 이땅의 기자들. 《관훈저널》, 통권 73호, 240~249.
- \_\_\_\_\_ (1999b). 『노근리 그후』. 서울: 월간 말.
-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언론정보학보》, 18호, 165~198.
- 유재천·이민웅 (1994). 『정부와 언론』. 서울: 나남.
- 이원락 (1991). 한국 신문의 관급보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웅 (2002).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 진실 보도: 사실, 사회적 구성, 진실 보도, 재귀성(reflexivity). 《언론과 사회》, 10권 3호, 9~51.
- 이재경·김진미 (2000). 한국 신문 기사의 취재원 사용관행 연구. 《한국언론학 연구》, 2호, 160~181.
- 정구도 (2003). 『노근리는 살아있다』. 서울: 백산서당.
- 한국언론재단 (2001). 『한·미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 (2003). 『한국의 언론인』.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04). 『한국 신문·방송 연감』. 서울: 한국언론재단.
- Bagdikian (1983). *The Media Monopoly*, Boston: Beacon Press.
- Blumler, J. G. & M. Gurevitch (1975). Towards a Comparative Framewor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in S. H. Chaffee ed., *Political Communication: Issu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Beverly Hills: Sage, 165~193.
- Blumler et al. (1992). *Comparatively Speaking: Communication and Culture Across Space and Time*. Newbury Park: Sage.
- Boorstin, D. (1971).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Y.: Harper & Row.
- Breed, W. (1955).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Social Forces*, 33, 326~335.

- Epstein, E. (1973). *News from Nowhere*, N.Y.: Vintage Books.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N.Y.: Vintage Book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5). *Inside Prime Time*, N.Y.: Pantheon Books.
- Goldenberg, E. (1975). *Making the Papers*, Lexington: D. C. Heath.
- Hallin, D. C. (1992). The 'High Modernism' of American Journ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42, 14~25.
- \_\_\_\_\_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n, D. C. & P. Mancini (1985). Speaking of the President: Political Structure and Representational Form in U.S. and Italian TV News, *Theory and Society*, 13: 829~50.
- Hanley, C. J. and M. Mendoza (2000). The Bridge at No Gun Ri: Investigative Reporting, Hidden History and Pulitzer Prize, *Press/Politics*, 5(4), 112~117.
- Hanley, C. J., S.-H. Choe, and M. Mendoza (2001). *The Bridge at No Gun Ri*, N.Y.: Henry Holt.
- Johnstone, J.(1976). Organizational Constraints on Newswork. *Journalism Quarterly*, 53, 5~13.
- Kovach, B. & T. Rosenstiel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Y.: Three Rivers Press.
- Merrill, J. C. (1988). Inclinations of Nations to Control Press and Attitudes on Professionalization. *Journalism Quarterly*, 65, 839~844.
- Nerone, J. ed. (1995). *Last Rights: Revisiting Four Theories of the Press*,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hoemaker, P. J. (1984). Media Treatment of Deviant Political Groups. *Journalism Quarterly*, 61, 66~75, 82.
- Shoemaker, P. J. & S.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Y.: Longman.
- Sigal, L.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D. C. Heath.
- Soloski, J. (1996). News Reporting and Professionalism: Some Constraints

on the Reporting of the News, *Media, Culture & Society*, 11(2), 207  
~228.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Y.: Fress Press.

White, D. M. (1950). The 'Gatekeeper': A Case Study in the Selection of  
News. *Journalism Quarterly*, 27, 383~390.

(최초 투고 2005. 2. 28, 최종원고 제출일 2005. 7. 5)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U.S. Media's Coverage of the No Gun Ri Massacre

Jae-Young Cha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Young-Nam Rhee

MA.

(Department of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he Korean and U.S. media's coverage of the No Gun Ri massacre, analyzing their usages of sources in the stories and explaining by the perspective of media sociology why they differed in them.

For the comparison with the AP's report, we selected only the reports of the Korean media which dealt with the incident itself.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Korean media utilized a very small number of sources, and that they relied on the victims alone. In contrast, the AP's sources were much more numerous drawn from both the victims and offenders. As a result, the Korean media failed to ensure the 'diversity of sources' and to illuminate the whole picture of the incident, although they had started to report it far earlier than the AP.

From the depth interviews with the reporters, through the framework of media sociology, it was found first at the personal level, that the difference was brought about by the divergent news evaluation. It seemed that the Korean journalists regarded the incident with relatively lower news value than their U.S. counterparts. Next, at the intra-organizational level, it was conceded, neither did the Korean new media have so flexible news collecting system, nor so much man-power and resource

as the AP, which were required for the coverage of such an incident. The Korean media had not established the convention to utilize various sources with conflicting interests. Last, at the extra-organizational level, the Korean news media's coverage was still influenced by the self-censorship mechanism due to the ideologies of 'pro-Americanism' and 'anti-communism', even though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itself enabled the sensitive incident to be dealt with eventually by the media.

Keywords: media comparison, usage of sources, media sociology